

AI,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발생 '제로' 원년 만들자

철새 분변서 AI 항원 잇따라 발견, 농가 참여로 완벽한 방역망 구축

철새 도래 시기가 다가오면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빨리 야생 철새 분변에서 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돼 축산 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6일 경남 창녕 저수지 인근 농경지의 야생 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된 데 이어 경기 파주 한강 하구와 충북 청주 미호천 인근에서 채취한 분변에서도 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됐다. 여기에다 겨울 철새 주요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 발생이 급증하는 등 국외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올 겨울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셈이다.

방역당국은 이달부터 2019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차단방역에 나선 상태다. AI 항원이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가금농가 이동을 통제하며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초동대응과 취약지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AI 발생에 취약한 지역농가의 가금류 사육도 제한하게 된다. 농협도 특별방역체계에 돌입했다. 농협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각급 사무소에 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국 일제소독의 날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장 방역인력을 6000여명을 재정비하고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에 대한 소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AI 차단방역을 실천해 AI 발생 없는 원년으로 만들길 기대

선제적 차단방역의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2017년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지만 대대적인 차단방역을 시행해 피해규모를 크게 줄인 바 있다. 이에 올해도 방역당국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력한 방역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차단방역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방역당국이 아무리 완전한 방역대책을 세웠더라도 현장에서 축산농가 등이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축산농가들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방역에 솔선할 때 완벽한 방역체계는 구축된다. 국민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통행에 조금 불편을 겪더라도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동참한다는 심정으로 차단방역에 협력해야 한다. 축산농가와 국민이 모두 한마음으로 AI 차단방역을 실천해 올해를 AI 발생 없는 원년으로 만들길 기대한다.

▶ 농민신문 [2018.10.24]

